

안산 산업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

- 불법 인력공급업체 및 사용업체 18개소 적발, 136명 직접고용 하도록 조치
- 10월부터 3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추가 감독 추진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'26.6.22.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.

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,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하였으며,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.

【감독 실시 및 법 위반 적발 현황】

(단위: 개소, 건)

구분	감독 실시	전체 위반		불법파견		금품 미지급		기타	
		사업장	적발	사업장	적발	사업장	적발	사업장	적발
합계	19개소	18개소	67건	18개소	40건*	7개소	9건	9개소	18건
제조업체	9개소	8개소	47건	8개소	25건	5개소	7건	7개소	15건
인력공급업체	10개소	10개소	20건	10개소	15건	2개소	2건	2개소	3건

* 대상업무 위반과 무허가 파견 동시 적발, 직접고용 규정, 양벌규정 적용 등에 따라 사업장 수보다 적발건수가 많음

감독 결과,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.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.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

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**인력공급업체**를 즉시 **범죄인**지하여 수사 중이며, 파견 인력을 사용한 **제조업체 8개소**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.

그 밖에도,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,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**노동관계법 위반 사실**을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.

고용노동부는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**불법 인력공급업체**에 대한 **집중신고기간('26.10.1~12.31)**을 운영하고,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.

* [신고 방법] 노동포털(www.labor.moel.go.kr)> 민원신청·조회 > 노동분야 상담·신고센터 > 불법 인력공급업체 익명제보

아울러,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,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,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.

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"그간 원청·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**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**"라고 강조하며, "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,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태훈 (044-202-7570)
	고용차별개선과	담당자	사무관	윤지현 (044-202-7574)
			주무관	황혜선 (044-202-7577)
	안산지청	책임자	과 장	이찬균 (031-412-1923)
	노동기준감독과	담당자	근로감독관	김문영 (031-412-1997)